

전남 기간제 교사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순회 교사 많고 육아휴직 영향

전남과 광주 교단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전남은 교사 2만1천564명 중 2840명(15.2%), 광주는 1만6292명 중 2천104명(14.8%)이 기간제였다.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12.3%)을 웃돌아 전남 1위, 광주는 2위였다.

전남 9.1%, 광주 10.0%였던 2015년과 비교해도 각각 6.1%p, 4.9%p 늘어나 증가율도 세종(7.6%p)에 이어 가장 높

았다.전국 평균 증가율은 2.8%p였다.

광주는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도 14.3%로 전국에서 두 번째였으며 전남은 9.0%로 전국 평균(11.4%)에 약간 못 미쳤다.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광주 53.6%, 전남 31.6%로 전국 평균(49.9%)과 대비됐다.

전남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겸임 순회 교사가 많고 육아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이라고 전남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승인하지 않은 탓에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



광주 동구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사고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 동구

지리·무등산 공원 내 안전취약 구간 77곳

조치 필요한 4·5등급 전국 145곳

광주·전남권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 내 탐방로 77곳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무등산 국립공원 2곳 내 탐방로 77곳이 안전 취약구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58개 탐방로에서 낙석·침수·추락 등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이 중 정비계획 수립이나 긴급 정비, 최악의 경우 탐방객 우회 유도 등 조치가 필요한 4·5등급 취약구간은 총 5곳이었다. 전국 국립공원 중 네번째로 많다.

총 탐방로 235km구간 중 18.34km가 취약구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산 공원의 경우 탐방로 19곳(총

2.07km)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이 중의 위험 징후가 관찰돼 피해 우려가 비교적 높은 4등급 판정을 받은 탐방로는 4곳이었다.

탐방로 안전성 평가 대상 중 21.05%에 달하며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전국적으로는 13개 공원에서 취약구간 614곳이 확인됐다.이 가운데 1등급 77곳, 2등급 210곳, 3등급 182곳, 4등급 118개, 5등급 27곳으로 나타났다.

탐방로 안전성 평가가 추진 중인 8개 국립공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약구간 탐방로 연장 길이가 가장 긴 곳은 북한산국립공원(32.05km)였다.

취약구간 탐방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태백산국립공원으로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은 안전성 4·5등급 판정 탐방로가 7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악산 48곳, 주왕산 8곳 순이었다.

/광주=차정준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9 | 해질 / 17:56

10월 15일 (화) 음력 : 9월 17일

수도권 날씨 **10~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7/18, 동두천 7/19, 백령도 9/16, 파주 6/18, 가평 7/17, 서울 10/19, 양평 8/19, 인천 10/19, 수원 10/18, 용인 10/18, 평택 8/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10년간 방치 학교부지, 진주 흥물로

학교, 전자도서관 등 소문만 무성 학생 수 예측 잘못해 용지 구입

진주 신도심 지구내 개발 당시 학교를 짓기 위해 마련된 부지들이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주민들은 이 부지들을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진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진주 지역내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학교 부지는 총 6곳. 이 중 개발이 진행중인 혁신도시와 신진주역 각각 1곳을 뺀 4곳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먼저 관문, 평거지구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택지개발사업용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관문 평거동 지구 개발 당시, 진주교육지원청은 당초 평거동 3·4지구 내에 4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좋은 자리에 중학교 부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 학교 신축은 하지못한채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봉원중학교도 안 들어선다고 하고, 전자도서관인가 그런 것도 들어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고, 실망감이 크다"면서 "부지에 잡초



진주시의 한 학교부지

가 많이 자라면서 벌레도 많고 비오기 나면 개구리도 울고 쥐도 나오고 이젠 흥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곳에 중학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학생들은, 결국 집과 먼 학교를 다니고 있다. 김나훈군(명신고 1학년)은 "근처에 사는데 동명중학교까지 걸어가기가 20분 정도 걸린다"면서 "이쪽에 학교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발 당시 학교가 들어선다는 말에 부지 인근에 집을 구했던 사람들의 실망감도 크다.

초전동 학교부지 인근 한 주민은 "택지 살 때는 중학교 부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가기도 좋겠다 싶어 샀다"면서 "중학교 부지인데 안 들어서는 거는 건설회사가 우리에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의 개발상향

에 따라 학생수 예측을 잘못하고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용지를 구입하였다는 것.

이에 대해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초등학교가 많다고 해서 중학교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주시 전체 중학생 수가 정원이 넘어야지만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청이랑 협의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더 큰 문제다.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시청, 교육지원청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아울러 활용 가치가 높은 넓은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남=이경화 기자 7470002@metroseoul.co.kr

진주시 도시재생 선정... 원도심 상호작용 관건

성북지구, 스마트 인프라 구축 목표 활용안, 문화재위 결론발표 후 운곽

진주성과 청소년수련관 주변 성북·중앙동 일원에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21억 원이 투입된다.

성북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난 8일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성북지구를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성북지구에서 청년이 머무르고 문화를 나누고 상인이 희망을 품고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뉴딜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으로 핵심 콘텐츠 4가지를 내세웠다.

먼저 머무름 비움사업이다. 청년허브하우스를 신축해 청소년이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등 청년이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진주시 성북지구 국토부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기자회견 모습

문화 나눔 비움사업이 두번째다. 창의문화 센터를 리모델링해 해당 센터를 기존 민속공예 공간 및 빛내림 나눔 거리와 연계해 문화 특화 공간 및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세번째는 희망 나눔 비움사업이다. 상가 콘텐츠를 발굴하고 희망상가를 조성하며 마을지도 및 관광 앱을 개발해 상권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정보 나눔 비움사업이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스마트 인프라 기반

구축이다. 시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 관건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 나오는 상승효과를 꼽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대첩광장과 의 관광객 이동 동선을 연계하거나 문화재 보존 구역 이외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활용안은 문화재위 추의 결론이 난 후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진주(경남)=류광현 기자 news24@

인천공항공, 3년내 사회적경제 조직 200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조직 200개 육성을 목표로 국내 사회적 경제와 포용적 성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연남장에서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

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약 25개 사회적 경제조직에 20억 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5월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 2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